설동일(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1])
1차 구술

1. **구술자**: 설동일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2년 7월 6일
5. **구술장소**: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사무실
6. **구술분량**: 05분 03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과거사 정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실천

구술자 : 대통령 선거할 때 인제 대통령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장인어른의 좌익 경력 했을(나왔을) 때 '그렇다고 내 사랑한 여인을 버리란 말인가' 유명하신 말인데 그 외에도 이제 역사의 왜곡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본인이 이제 꼭 해야 될 부분에 역사 바로 세우기 부분을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그 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를 만들 때도 대통령께서 가장 강경하셨어요. 이 법에. 최소한 그 시효라는 게 있는데 일정 세월이 지나며는 위법이 있더라도 그냥 면제되는, 면책되는 이 시효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으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시효 폐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셨다고. 결국은 이제 관철은 못하고 그건 그대로 가긴 하셨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 주셨고. 이게 이제 두 가진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서 가장 인제 가해 쪽의 역할을 한 국정원, 경찰, 군 이 부분들을 외부에서 어쨌든 '느그(너희가) 잘못했지' 하는 것보다 스스로 진실 규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걸 이미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 지기 전에 이미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경찰 과거사위원회, 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있었고. 그걸 또 직접 지시하신 분이 또 대통령이시기도 하고.

---

1) 2006년~2009년 재직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 2005년 12월 1일 출범, 4년 2개월 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종합보고서 작성과 함께 2010년 6월 30일 활동을 완료했으며 2010년 12월 31일 해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그렇게 만드시고 검찰 쪽도 만들어야 되는데 검찰은 끝까지 버텼죠. 검사 집단. 그 사법부 쪽에는 어쨌든 재판부는 재판으로 좀 하면 안 되겠냐 라고 그랬고. 검찰 쪽은 끝까지 버텼고. 나머지는 이자(이제)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으로, 직접 권력기관이 과거에 했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는 거를 총괄하는 어떤 진실화해위원회, 그 다음에 인제 개별 사건 세 가진데 크게는 하나는 육이오(6.25) 때 민간인 학살 문제. 그 후에 독재시대 때 인권침해 사건. 그 전에 넘어가며는 이제, 어쨌든 독립운동 부분은 한나라당이 좀 국가가 잘 한 일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사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규명해보자 그래서 그걸 인제 법 제도로 구체화시키고 그걸 포괄적으로 해원(解寃)할 수 있는, 원을 푸는 그 피해자들의. 그런 걸 좀 더 연속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종합적인 하나의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전에 어쨌든 각 기관이 자기반성의, 자기성찰의 자체 기관을 만들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기관이었고 성과였죠.

새누리당, 그분이 그때(참여정부 시기) 이명박 대통령하고 인제 야권, 아주 유력한 대선후보(였고), 이 분과 연관돼있는 게 정수장학휜데 부산일보, MBC하고 같이. 그분은 또 정수장학회 또 장학생 출신이잖아요, 대통령님이. 평소에 많이 들었겠죠. 어떻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부산일보를 뺏겼는가, 대통령께서 그걸 장물(贓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장물. 그라면서 이제 한탄을 하신 게 '어떤 사람은 그냥 뺏들어가(뺏어서) 자기 가족에게 물려주는데 나는 대통령이 돼가(되어서) 장물도 본인한테 못 찾아주나' 이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하나의 단적인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4.3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에 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사과하는 문제[3]를, 여러 가지 참모들이나 또 인제 각 부처에서 반대하기도 할 때 가셔가지고 사과를 직접 하셨고. 그 다음에 울산 그 보도연맹사건에는 그때는 인제 (임기) 말기라서 오시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직접 사과[4]를 하시고. 저희들 꼭 보고서를 대통령님께, 나오고 나며는

3)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2006년 4월 3일에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무력충돌과 진압의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 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브리핑 참고

4)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 25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은 메시지 일부. "58년 전,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입니다.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6·25전쟁의 와중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서 고통 받으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브리핑 참고. 보

우리 말고도 친일진상규명 그 다음에 (일제하)강제동원, 군 의문사, 다 과거사위원회가 몇 개 됐는데 가가지고 인제 직접 보고서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분이 대통령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서는 그분이 아니였으면 이렇게까지 성과를 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면담자 :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수사권이라던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남는 문제, 힘이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돼서 많이 안타까와 하셨던 걸로.

구술자 : 예,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걸로 되겠나' 라고 저하고 직접 물으시기도 했었어요. 이걸 관철시키…. 시효법, 시효소멸 부분에 대해서 '관철해 줄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걱정이다, 이거 갖고 제대로 힘을 가지고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겠냐' 이렇게 걱정도 하시고 그랬어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56. 부산 출생

197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입학

1981. 부림사건으로 구속

2002. 부산민주공원 관장

200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2010. -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2012년 현재)

2011.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

혁신과 통합 부산대표(2012년 현재)

1981년 부림사건 피해자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노 대통령이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기획단장을 맡았다. 2002년 부산민주공원 관장, 2006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012년 현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연맹은 1949년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한 반공단체로, 정식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으며 6·25전쟁 중 최초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으로 이어졌다.